

---

「2021-제6호(Vol. 14호)」

#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

본 자료는 2021. 7. 8.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분 야 별 목 차                       |                                                                                                                                                                                                                                                                                                                                           |                                                                                      |
|---------------------------------|-------------------------------------------------------------------------------------------------------------------------------------------------------------------------------------------------------------------------------------------------------------------------------------------------------------------------------------------|--------------------------------------------------------------------------------------|
| 분 야                             | 제 목                                                                                                                                                                                                                                                                                                                                       | 자료 출처                                                                                |
| 1. 경제<br>(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 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li> <li>•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설문조사</li> <li>•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li> </ul>                                                                                                                                                                                   | 국제금융센터<br>현대경제연구원<br>기획재정부                                                           |
| 2. 재정<br>(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li> <li>•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li> </ul>                                                                                                                                                                                                                                  | 기획재정부<br>국회예산정책처                                                                     |
| 3. 예산 · 재정<br>관련법령<br>(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li> <li>•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li> <li>•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li> </ul>                                                                                                                                                                | 보건복지부<br>국토교통부<br>법제처                                                                |
| 4. 정책 및 연구<br>(4~7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과 시사점</li> <li>•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증세 태도 연구</li> <li>•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li> <li>•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li> <li>•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 · 금융 지원체계구축 방안</li> <li>•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li> <li>•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li> <li>•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li> </ul> | 국회예산정책처<br>국회예산정책처<br>국회입법조사처<br>대외경제정책연구원<br>국토연구원<br>국토연구원<br>한국지방재정공제회<br>한국개발연구원 |
| 5. 예산 · 재정관련<br>뉴스브리핑<br>(8~9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li> <li>•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li> <li>•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li> <li>•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li> <li>• 신북방 수출 역대 최고, 농식품 시장개척 결실 맺어</li> <li>•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li> </ul>                                  | 기획재정부<br>기획재정부<br>기획재정부<br>기획재정부<br>농림축산식품부<br>중소벤처기업부                               |

# 1. 경제

출처

## ■ 2021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이슈

국제금융센터

- 2021년 하반기는 팬데믹 위기가 점차 줄어들면서 위기 대응책도 회수를 논의하는 시기, 세계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하는 포스트 팬데믹 기간의 초기 단계임.
- 또한, 세계경제가 어떠한 성장경로를 이어갈지와 오랜 기간 이어온 저금리 Regime이 변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 하반기 방향은 크게 'Boom의 지속'과 '과열에 따른 조정' 중 어디일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세계경제의 성장 지속 전망이 우세함.
- 다만, 낙관적 전망 속에서도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현재 잠재문제는 ▲과도한 재정 투입 ▲급증한 글로벌 유동성 ▲자산가격 과열 등임)
- 2021년 하반기 주요이슈는 ① 코로나19, 어떻게 될 것인가? ② 불균형 회복의 모습 (Diverged Recovery) ③ i-Risks 향방 (inflation, interest rates, investment) ④ 미국 통화정책 경로 ⑤ 美·中 갈등의 새로운 국면 ⑥ 바이든의 선택 ⑦ 글로벌 은행권 핵심 키워드 등임.(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 ■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설문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최근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었음.
-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부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살펴 봄.
-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꼽았음.
- (시사점) 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함 ② 향후 경기 회복 및 하방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③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④ ESG 경영, 신산업 발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 흐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바로가기](#)

##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6.28.(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힘.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완전한 경제회복(4%이상 성장+고용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으로,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부문별 회복속도가 불균등(uneven)한 가운데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바로가기](#)

## 2. 재정

출처

###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및 요구 규모)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
- (금번 추경의 4가지 특징)
  - ①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제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 ②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 세출증액 기준 2위: '20.3차 35.1조원(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증액 23.7조원)
  - ③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 ④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주요 내용) 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원(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 ② 백신·방역 4.4조원, ③ 고용·민생 2.6조원, ④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임.

[!\[\]\(23d9fc146e83b5c3013cfa32c784f8d5\_img.jpg\) 바로가기](#)

### ■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GDP)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한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 때, 혹은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닌 경기여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재정수지로 해석 가능하며, 일시적인 재정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는 실질GDP 요인을 제외한 잠재GDP는 재정 중립적인 잠재GDP 수준으로 해석 가능함.
-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한 추정) 3변수(재정수지,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간의 이론적 관계를 고려한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GDP와 이에 상응하는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동시에 추정함. \* 모형 추정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분석 결과)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은 관측되지 않은 변수로 적용하는 추정방법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생산수준 및 재정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경제성장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가운데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와 단기적 경기안정화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등의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을 위한 유용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과제) 총량적 재정수지만을 분석한 본 모형을 주요 재정수입, 지출항목과 경기변동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경기변동에 따른 주요 항목별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를 동시에 추정할 필요가 있음.

[!\[\]\(aa53ad6fea213b8b2226d3077e30533a\_img.jpg\) 바로가기](#)

###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1.6.22.)

보건복지부

-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21.7.1.(목)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였음.
- 또한,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항목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74d4806277d7e73349d8e8c0897931e9\_img.jpg\) 바로가기](#)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3.16. 개정 / '21.6.17. 시행)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6.17.(목) 공포·시행함.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함.
-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등임.

[!\[\]\(8bba887393ca45b761e5cb49e755e762\_img.jpg\) 바로가기](#)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5. 개정 / '21.7.6. 시행)

법제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하역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fb13ad0bfa3d86868cdd3883e5665b3\_img.jpg\)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목적) 본 연구는 경제위기의 세입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 경제위기 시 세입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향후 세입여건의 향방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음.
-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 외환위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은 덜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이 컸음. 외환위기에는 금리, 물가, 유가 등 가격지표의 급등이 경기충격에 따른 세입충격을 완화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자산시장의 거품붕괴와 연관되어 경기침체가 전개됐다는 점 ▲소비여력 및 소비성향의 둔화로 회복국면에도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된 점 ▲경기수축국면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가 높았던 반면 경기회복국면의 동조화 정도는 낮았던 특징들에 따라 세입 충격이 컸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입흐름)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관련 세수의 급등세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실물 부문의 세입충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될 경우 세입증가율은 단기적으로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세입증가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입충격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상존함.

[바로가기](#)

### ■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증세 태도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목적) 본 연구는 복지와 복지증세 태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증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
- (연구 방법) 먼저 증세 태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모의실험 설계에 입각한 설문지를 만들고, 지역별/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로 인구비례 할당된 성인 2,502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함. \* 설문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많았고, 관련 증세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음. 하지만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 반대가 찬성을 앞서게 되고, 증세는 부자와 기업을 통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뉘프(Noomp) 현상이 확인됨. 한편,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세액은 평균적으로 연간 2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에 불과함.
  - \* 복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도 추가 납부 세액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받는” 액수가 늘어나면 추가 납부 세액도 증가함 → 그러나, 평균적으로 필요 예산액의 약 10% 가량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견이 일반적임.
- (정부의 증세 전략) ① 정부가 부패하지 않고 내 세금을 가지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조세 순응성이 높아짐 ② 국민개세(國民皆稅)의 원칙을 견지하고 세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③ 증세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정책, 중산층 만들기 등 궁극적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가 필요함 ④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부 신뢰 다음으로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변수는 진보적 이념 성향으로서 이와 같은 성향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국가경영 능력을 높여야 함.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조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 및 입법기술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법률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세의 조례에 대한 위임’이나,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이 부과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과세’ 등은 일종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정한 경우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법령의 적용·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나가며) 조세법률주의는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 5. 21)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
- (정상회담을 전후한 남·북·미의 대응)  
[美의 대북정책 재검토] 美 바이든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1개월 전에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면서 北에 대한 외교적 접근과 동맹국과의 협력,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함. → [北의 반발] 北은 두 차례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美를 비판하였으나, 비핵화 협상 자체를 깰 의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美의 갈등 진화] 美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北의 담화(2021. 5. 2)에 답하면서 북미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음. → [北과 美의 탐색전] 北이 ‘대외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면서 북미간에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양측이 ‘대화와 압박, 대화와 대결’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려 들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의 중간자적 노력]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언급이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北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北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에 따라 관망전략(wait-and-see)을 통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음.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구축 방안

국토연구원

- (주요 내용) 도시재생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유형이 다양화되었지만 사업의 결과는 전국이 대동소이하며 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계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기금은 지원방식이 담보기반 ‘융자’에서 사업기반 ‘투자’로 업그레이드되었지만, 지역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부채성 재원에 의존한 직영방식으로 안정 지향적 관행 지속
- (정책 제안)
  - ① (국가의 역할 재설정) 국가는 경제기반형, 혁신지구 등 사업의 과급범위가 지역 외로 확장되는 사업을 담당하고, 근린재생형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은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권한 위임
  - ②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 기본적으로 예산-공공부문, 기금-민간부문 지원이라는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하고, 기금을 강화하여 쇠퇴지역 내 민간부문 활성화 지원
  - ③ (근린재생형은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별 총액 예산지원) 경제기반형, 혁신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근린재생형으로 통폐합하고,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별로 도시리그에 따른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하여 유연성 확보
  - ④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 조성) 광역지자체별로 국가-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이 함께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금융기관과 관련된 전문 민간기관들과 함께 쇠퇴지역 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체 또는 사업을 발굴, 교육, 육성 및 지원

[!\[\]\(339a16584d5da0f0a3ca4e9ec17bf6a1\_img.jpg\) 바로가기](#)

### ■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 (주요 내용) 국가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하던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와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산업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기업수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와 취약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 도출하고자 함.
- (정책 방안)
  - 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 광역적·기능적 경계를 가진 클러스터 권역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거점 육성 필요
    - 부처별 혁신성장사업을 연계해 기업 성장단계마다 패키지화된 지원체계가 제공 되도록 유도
    - 지역 내발적인 정책기획, 사업연계, 산학연 네트워킹을 전담할 중개기관 육성
  - ② 고착된 클러스터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
    - 이종분야 간 학습·혁신·실험을 촉진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상향식 협의기구 마련
    - 기존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창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동력 쇄신
    - 지역 간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정책학습 플랫폼 및 전략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6059a5aa8b4ca7bb793408023d6c6e42\_img.jpg\)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의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 (서론)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주민 자치 시대에 적절한 법률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전부개정된 재무장의 특징) 이번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을 신설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 조정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해소가 핵심 원칙임을 밝히고 있음.
  - \*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 구조: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2절 예산과 결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5절 보칙
- (지방재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① 지방재정의 조정 규정 신설 ② 건전재정 및 국가시책의 구현 원칙 존치 ③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규정 존치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신설 시 예·결산 처리의 조문화 ⑤ 지방세의 부과·징수 규정 존치 ⑥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규정 존치 ⑦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규정 존치 등임. \*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향후 개정방향) ① 지방재정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재무장 명칭 변경 ② 지방재정의 조정이 아닌 재정 조정으로의 수정 ③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보 ④ 세출의 책임성 구현 등임.
- (결론) 전부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과 법적 토대를 제공해야 할 재무장은 크게 개편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제자리 찾기와 역할 정립에 모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합심이 필요함.

[!\[\]\(d66ff64371a51729ac8c1cdaa685ba6f\_img.jpg\) 바로가기](#)

### ■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문제의 제기)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초등 돌봄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되어 학생들 간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함.
  -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7.8%p,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시간 증가하고, 사교육 참여 확률은 8.5%p 감소함.
  - \* 방과후학교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근로 참여, 평균 근로시간, 사교육 참여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 해외 주요국의 돌봄 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고,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결론 및 정책제언) ①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 재정립 ②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③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④ 정규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는 현 돌봄 정책과의 연계 검토 등임.

[!\[\]\(faf942dc3e59ce8eb64b4ac481eca7e0\_img.jpg\) 바로가기](#)

## 5. 뉴스브리핑

출처

### ■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장관은 7.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우리 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방안(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② CPTPP 대비 제도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점검 분야) ③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④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국토·교통 분야)의 4가지 안건을 논의함.

[!\[\]\(339a16584d5da0f0a3ca4e9ec17bf6a1\_img.jpg\)바로가기](#)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7.5.(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급방식, 추가지급 등임.
  - ②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적기 지급이 가능하며,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가 쉽기 때문임.
  - ③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 ④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고, 전년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임.

[!\[\]\(6059a5aa8b4ca7bb793408023d6c6e42\_img.jpg\)바로가기](#)

###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6.25.(금)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힘.
- 지난 6.18.(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됨.
- 이를 계기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하였으며, 평가오류 주요내용은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 적용 오류 ▲평가 점수 입력 누락으로,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 구축하고 강화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8월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e3275251d0893157c3584e20c81dc3ba\_img.jpg\)바로가기](#)

## 5. 뉴스브리핑

출처

### ■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하였다고 6.15.(화) 밝힘.  
※ 전년 대비 요구사업 수는 24.2%, 요구 금액은 8.1% 증가
-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되며, 이 중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았는데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됨.
-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9.3.(금)까지 국회에 제출됨.

[바로가기](#)

### ■ 신북방 수출 역대 최고, 농식품 시장개척 결실 맺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5월 누계기준 신북방 국가 농식품 수출이 129.3백만불로 전년동기(89.6) 대비 44.3% 증가하였다고 밝힘.
- 이는 5월 누계기준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성과이며, 2018년 이후 감소세에 있던 신북방 지역 수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임.
-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9.9백만불로 34.3%, 가공식품이 119.4백만불로 45.2%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러시아(84,561천불, 53.2%↑), 몽골(30,759, 47.7%), 우즈베키스탄(2,868, 28.5%), 키르기스스탄(842, 39.8%)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신북방 지역 13개국 중 러시아와 몽골 2개국의 수출 비중이 89.2%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농식품부는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을 시장개척 전략 국가로 지정, 사무소 개설 및 시장개척 요원 파견, 시장개척 참여 선도기업 육성, 코로나19 대응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확대 등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바로가기](#)

### ■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7.1.(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한 것임.
- 주요 심의안건은 신규 특구지정 4건, 특구 안착화 방안(임시허가 5건, 실증특례 연장 17건) 등이고, 보고안건은 '20년 운영 성과평가 결과, 특구계획 변경 등 2건임.
- 이번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바로가기](#)